전주매일 CMYK

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 | 연 | 성 | 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18년 7월 31일 화요일 (음 6월 19일) 제2099호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시민의 힘으로 전주문화특별시 조성

문화예술 전문가 등 구성
시민연구모임 활동 본격화
선도사업 발굴 아이디어
현장 목소리 등 전달돼

내달 특별법 초안 논의
9월 법안 마련 세미나 열어

전주시는 30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문화연구가와 문화예술분야 교수, 문화기획자, 문화시설 대표, 청년예술가, 행정, 언론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19명으로 구성된 전주문화특별시 시민연구모임 위원과 5명의 특별법 연구모임 위원, 3인의 문화관광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전주지역 문화·예술 전문가와 청년예술가, 입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주문화특별시 시민연구모임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전주시는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풍부한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 관련 국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각 정당에 대선공약으로 건의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정당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초석이 될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천년이 넘는 역사성과 전통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전주가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30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문화연구가와 문화예술분야 교수, 문화기획자, 문화시설 대표, 청년예술가, 행정, 언론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19명으로 구성된 전주문화특별시 시민연구모임 위원과 5명의 특별법 연구모임 위원, 3인의 문화관광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전주문화특별시, 시민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2차 회의는 앞서 열린 1차회의에서 발족한 전주문화특별시 시민연구모임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회의로 이 계획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추진중인 '2030전주문화비전 수립용역' 중 전주문화특별시 '선도사업 발굴'에 대한 아이디어와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었다.

또한, 참석자들은 '전주문화특별시 특별법 마련 연구'에 대한 경과보고를 청취한 후 시민연구모임 주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위한 자문 및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토론도 벌였다.

시는 오는 8월에는 핵심사업 및 세부사업을 확정하고 특별법 초안에 대해 논의하고 전주문화특별시 추진 필요성과 당위성 등 논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후, 오는 9월에는 특별법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괌투어를 추진하는 등 시민공감대 형성과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힘써 전주문화특별시 실현을 위한 시민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앞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 등과 지난 2017년 5월 29일 시청 4층회의실에서 '대통령의 약속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조속한 실현 위해 힘 하나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 공약의 경우 중앙선관위 선거공약집과 '문재인 1번가'에도 포함된 문 대통령의 약속인 만큼 그간 지역균형발전에서 소외돼왔던 전북이 전주가 지닌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그간 전북이 보통교부세를 광역시가 있는 자치단체에 비해 최대 2배차이가 날 정도로 적게 지원을 받아왔고 광주·전남 중심으로 주요 정책 및 재원배분이 이뤄진 만큼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주가 문화특별시로서 행정적인 위상을 갖도록 하는것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송효철 기자

"전북도, 문화재 발굴 조사기반 우선 확보를"

전북도의회 의정 중계석

관련기사3면

강용구 의원, 5분발언서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 가야문화권 유물 보존 공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요청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의원(남원2·더불어민주당·사진)은 30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북도의 문화재 발굴·조사 기반을 우선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서 가야유적이 처음 발견된 것은 1982년 남원 월산리 고분군으로 벌써 36년 전이고, 그동안 400여 기의 가야고분과 80여 개소 봉수, 180여 개소가 넘는 제철유적이 발견되었음에도 호남지역 가야유적 국가 사적은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 유일하다.

반면에, 영남지역에서는 26건이나 되는 가야유적을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고 국비를 확보해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그동안 전북도가 얼마나 문화재 발굴·조사에 소극적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실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북은 백제문화의 보고(寶庫)인데다, 대규모 가야문화 유적이 발굴되고 있음에도 정작 관련된 연구들은 타지역 문화재연구소를 의존하고 있고, 심지어 내년 가야문화권 긴급발굴 예산으로 국비 10억원을 확보했음에도 창원에 있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를 통해 남원시와 장수군 등에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따라서 강 의원은 전북의 탁월한 유적과 유물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대로 발굴·조사할 수 있도록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유치에 발 벗고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도내에서 출토된 가야문화권 유물들이 전주국립박물관, 전북대·군산대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흩어져 보관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보존 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 각 시군에 문화재 관련 학예사 1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전북도에서부터 팀장급도 문화재 관련 전문직이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문화재를 제대로 보존·유지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민선7기 첫 번째 성과가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를' 유치로 이어지도록 적극 대처해야 한다. 또한 문화재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문화재 전문인력이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등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호남 최초 한성도읍기 백제 토축' 완주 배매산성 발굴조사

호남지역 최초 한성도읍기 백제 토축산성인 완주 배매산성에 대한 발굴조사가 실시된다.

30일 완주군은 전북도의 백제문화융성 프로젝트 일환으로 완주 배매산성 발굴조사를 지난 2017년 1차 조사에 이어 이달 말부터 11월까지 연차 발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7년에 확인된 유구의 정밀조사와 주변지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배매산성의 축조방식과 규모, 잔존상태 등을 보다 심도있게 확인하는데 주력한다.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에 위치한 배매산성은 지난 2000년 구제 발굴조사 당시 목책열, 집수시설, 건물지, 수혈유구 등 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출토됐지만 산성의 축조 시기와 기법 등을 알 수 있는 체계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못한 상태였다.

2017년 조사에서는 둘레 약 280m, 너비 약 15m, 높이 최대 3m 성벽의 잔존과 단면에서 토사와 쇄석을 층층히 쌓는 삭토기법과 최하층에서 벽을 따라 열을 지어 분포하는 나무기둥구멍이 확인됐다.

또 호남지역 한성도읍기 백제산성의 최초사례로 백제 한성도읍기 말기의 고배, 삼족토기, 장란형토기 등 토기류와 쇠도끼가 출토돼 당시 산성 축조기법과 호남 지역으로 백제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매일 INDEX
16면 - 제8대 김제시의회 의정 설계

김윤덕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재도전장 내밀어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소통과 화합의 도당을 만들겠다"며 재도전장을 내밀었다.

〈관련사진 3면〉

30일 김 위원장은 전북도의회에서 출마회견을 열고 "전북도와 중앙 정치권을 잇는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하며 전북의 목소리를 높이는 도당위원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단계 성숙된 정치인으로서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위해 도당위원장에 출마하고자 결심했다"며 "그리고 경선 후보로 등록했고 이번 경선에 정정당당히 임해 전북도민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선택을 받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 위원장은 ▲당원이 진짜 주인 되는 도당 ▲공정한 원칙이 바로서는 도당 등의 공약도 발표했다.

/뉴시스